투데이 칼럼

북 · 러 동반자 관계

정 복 규
논설위원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다시 초청했다. 북러 정상은 기존 두 나라의 관계를 대체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이중 특히 '유사시 상호 지원'을 약속한 조약 제4조가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정상은 90분 확대정상회담에 이어 비공식 단독회담을 2시간 동안 진행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문에 서명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러시아의 대외 관계 유형으로 볼 때 동맹의 바로 전 단계를 말한다. 러시아의 대외 관계는 '전략적 동맹'이 최상단에 있다. 그 아래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선린 우호 관계'로 단계가 내려간다.

북한은 그간 가장 아래 단계인 '선린 우호 관계'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번에 2단계 수직 상승해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직후 북러 관계를 세 차례나 동맹으로 강조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북러 관계를 '새로운 수준'이라고 지칭해 다른 뉘앙스를 느끼게 했다. 북한이 이번 관계 격상에 부여하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인데, 북러 관계를 한미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만들고 싶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푸틴 대통령이 떠난 직후 안보 관련 조약 전문을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공개했다. 총 23개 조항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조약 제4조다. "북한과 러시아 중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보기에 따라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일었다. 북러는 지난 1961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조약을 맺었는데, 러시아가 균형 외교를 추구하면서 1996년 폐기됐다.

이번에 조약 체결로 1961년 조약을 복원한 듯도 보이지만, 엄밀하게 보면 차이가 있다. 1961년 조약 제1조에는 어느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 개입을 하는 데 어떠한 전제조건도 달지 않았다.

반면 새 조약에는 유엔헌장 제51조는 물론 북한과 러시아 법에 준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과 군사 동맹을 원하는 북측 요구에, 러시아가 2중, 3중의 조건을 붙여 슬쩍 피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북러 간 새 조약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푸틴 대통령도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러시아도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약상 군사 지원은 오직 침공이 있을 때 적용되는데,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러 확대 정상회담에는 러시아의 다양한 분야의 책임자들이 배석했다. 러시아 측 배석자가 북한 측의 배를 넘었다. 주로 군사, 외교 분야 수장들만 참석한 북한과는 달리 러시아 측에선 에너지 담당 부총리와 천연자원부 장관, 보건장관에, 철도공사 사장까지 참석했다.

실제 북러 양국은 국경을 잇는 자동차 전용 다리를 건설하기로 했다. 현재 두만강에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있지만 철도 운송만 가능하다. 자동차 전용 국경 다리가 건설되면, 북중러 3국 경제협력은 물론 북한 노동자 파견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북러 양국을 옥죄는 서방의 제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했다. 북한이 공개한 조약 16조를 보면, '일방적인 강제조치의 적용을 반대한다고' 명시했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탈피해 루블화 등을 활용한 그들만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대목은 북러 간 군사 분야 협력이다.

실제 러시아 국방장관 외에도 방산을 담당하는 국방차관이 배석해 눈길을 끌었다. 방북단에는 연방우주공사 사장도 포함됐다. 북한이 공들이고 있는 정찰위성 발사 기술 협력부터 빠르게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바이든 발언에 박수하는 지지자

지난 6월 27일(현지시각) 미 워싱턴주 시애틀의 한 술집에서 바이든·해리스 티셔츠를 입은 애이미 포팅어라는 여성이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연방 의회 난입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언급하는 TV 토론 속 조 바이든 대통령을 보며 박수하고 있다.

이스라엘 법원 결정에 따라 징집 대상된 '하레디'

지난 6월 27일(현지시각)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 브네이 브락에서 초정통파 '하레디' 남성들이 고속도로를 막고 군대 징집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25일 이스라엘 대법원은 "하레디의 병역면제 혜택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군 의무 복무가 모든 이스라엘 국민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복무를 면제받았던 하레디의 징집이 가능해지면서, 이스라엘 정치·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 설

지자체의 기부채납 갈등

최근 어느 지자체 시범아파트에 기부채납 시설로 '데이케어 센터(치매노인 돌봄시설)'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시범아파트 소유주들 사이에서 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시범아파트 정비계획이 통과할 때 심의조건으로 데이케어 센터 건립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벌어진 사태다.

이를 소유주들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사업시행자는 물론,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를 향해서도 '갑질'이라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노인 시설 외에 일대주택, 공공보행통로 등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기부채납 시설로 분류된다. 용적률과 맞바꾼 일대 주택 건립을 두고 지자체와 조합이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민들로서는 프라이버시와 고급단지로서 재산권을 지키길 바란다.

반면 지자체는 민간개발과 동시에 공공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활용한다.

기부채납 시설은 외부에서 이용하는 시설이 대다수다. 그러나 결정권이 없다. 공공기여는 지자체가 판단했을 때 해당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민들 선호도가 낮은 시설이 들어온다고 이건 빼고 저걸로 해 달라는 건 공공기여 제도 운영 방침과 전혀 맞지 않는다. 노령인구 증가로 노인시설이 늘어나게 되는 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단지 내 공원, 공공보행로, 일대주택 등도 마찬가지다. 공공에 필요한 시설을 짓는 것이므로 소유주들 입맛대로 기부채납 시설을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기부채납을 두고 지자체가 논란이 된 사업장에 강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비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기부채납의 필요성과 기본 원칙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 서로의 입장 차를 좁혀가야 한다.

대기업 오너 일가 지분

국내 대기업 집단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가치가 무려 155조 6,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22년보다 19조 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도 14%에 육박했다.

이는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4년 지정 대기업 집단 88곳 중 동일인이 있는 78곳을 대상으로 오너 일가 계열사 보유 주식 및 지분가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오너 일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지분 가치가 모두 증가했다.

하지만, 자녀 세대의 지분가치 비중이 1%포인트(p) 가까이 늘어 지분 상속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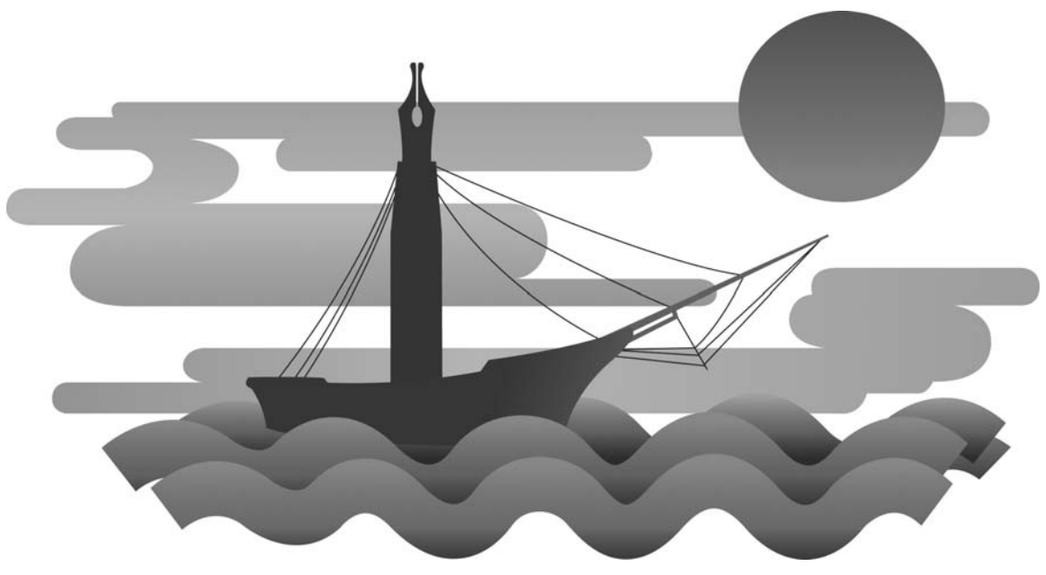
자녀 세대 지분 가치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28.4%p 증가한 영원이었다. 이어 한솔(25.3%p), 에코프로(16.7%p), 효성(14.8%p), DN(10.9%p), 보성(10.1%p) 순으로 자녀 세대 비중이 늘었다.

반면 넥슨, 엘디엘, 삼천리,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앤컴퍼니그룹 등은 자녀 세대 지분가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넥슨은 2022년 말 68.2%였던 자녀 세대 지분가치 비중이 57.4%로 오히려 10.8%p 감소했다.

이는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두 딸인 김정민·김정윤씨가 넥슨 지주사 NXC 지분을 상속세로 납부했기 때문이다. 엘디엘은 자녀 세대 지분가치 비중이 2022년 말 60.3%에서 현재 52.0%로 8.3%p 감소했다.

삼천리도 2022년 말 31.2%에서 27.4%로 3.8%p 줄었다. 이외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3.4%p) 한국앤컴퍼니그룹(-3.3%p), 씨제이(-3.0%p) 등도 자녀 세대 지분가치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